"독도문제, 단호·냉철하게 대처할 것"

李 대통령 "독도 수호는 대통령의 책무"

대일 관계는 독도 문제와 별개로 유지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와 관련, "독도를 포함한 영토주권과 관련해선 대통령으로서 단호하고 냉철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출범한 '독도연구소' 개소식 참석자들과 청와대에서 가진 독도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의 영토이며, 영토의 보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독도 문제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10년, 20년 전 우리가 힘이 없고 국제적 네트워킹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대응방식이 달라야 하며, 아주 지혜로운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소리 지르고 그러다 며칠 지나면 식어버리는 식이 아니라 학계와 기업, 정부 그리고 750만명의 해외 동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연구해 대응하면 세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독도 영토를 수호하는 데는 정부와 민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 모두가 독도 지킴이가 될 때 그 누구도 독도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며 독도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건국 60주년을 맞는 8·15에 대해 "전쟁의 폐허를 딛고, 100년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구었다"고 평가한 뒤 "향후 또 다른 60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건국 60주년의 뜻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의미있는 해에 우리가 독도 문제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 문제는 문제대로 해 나가고, 또 한편으론 일본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도지킴이'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불능화 완료→핵 폐기 이행→핵 폐기 완료

정부 '비핵·개방 3000' 3단계 이행방안 제시

정부가 '비핵·개방 3000' 구상의 3단계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14일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이행계획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완료 ▲북한의 핵 폐기 이행 ▲북한의 핵 폐기 완료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정부는 1단계에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이것이 검증을 통해 확인되면 즉시 비핵·개방 3000구상 가동 준비에 돌입,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등을 설치해 이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의 일환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 투자·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한의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이행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2단계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그 중 교육·생활향상 등 우선 시행이 가능한 내용부터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3단계에서는 5대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시키고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수위때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의견과 내부 의견 등을 조율해 구상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도 감사원과 같은 감찰권 가져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18대 국회가 두 달째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공동 취재단과 인터뷰를 갖고 국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오랫동안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국회는 입법, 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예산심의 등의 기능이 있다. 그러나 국회는 그동안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특히,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과 같은 정부 부처 감찰권을 갖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회 기능에 대한 평가는

▲전체 입법 가운데 경우 정부 입법이 전체의 86%를 차지할 만큼 의원 입법이 미미한 상황이다. 또, 행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탓에 감시 및 비판 기능도 활발하지 않다. 또, 정부가 예산 편성은 물론 심의·확정 과정까지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어 국회의 3대 주요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한다면

▲우선 '여야 간의 견제'가 아닌 '입법부-행정부 간의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현재 여야 의원들이 마주보는 상임위 배치를 의원들과 행정부 관료들이 마주보는 배치로 바꿀 계획이다.

-개헌 이슈는

▲지금까지 정당과 정권이 주도한 개헌은 있었지만 국민적인 개헌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 개헌은 특정 정파나 정당의 입장에 치중하지 않은 국민 개헌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임동욱기자 tuim@

북핵 외교 활기…검증 돌파구 열리나

김숙 본부장 미·일과 연쇄 회동

성 김 美 대북특사 방중도 주목

한·미, 한·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연쇄 회동하고 성 김 미 대북협상 특사가 북한과의 회동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등 한동안 잠잠하던 북핵 외교가에 활기가 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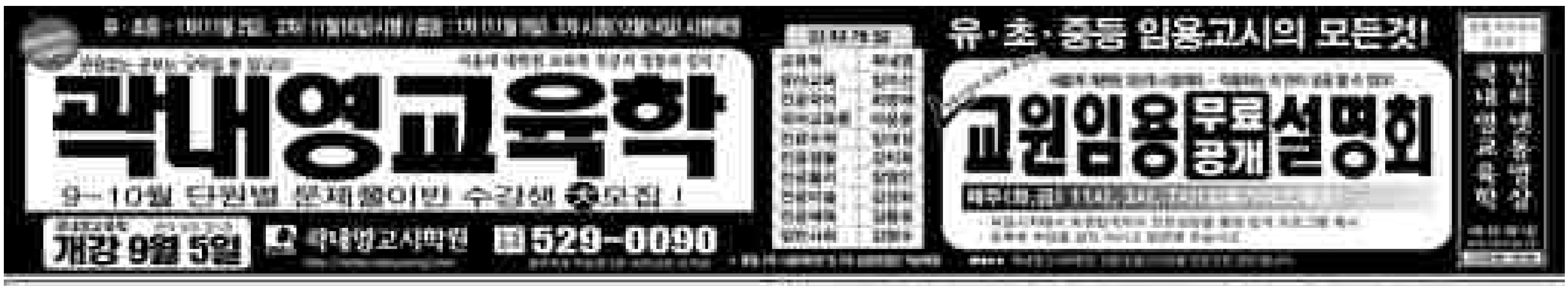
한·미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5일 뉴욕에서 회동하고 조속한 검증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11일이 지났음에도 미국이 검증체제 미비를 이유로 해제를 미루면서 자칫 북핵 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김 본부장은 힐 차관보와의 협의를 마친 뒤 도쿄로 건너가 19일에는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날 예정이다.

한·일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12일 열린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대북 에너지지원에 일본이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중등교과서 해설서 문제가 불거진 뒤 열리는 첫 한·일 외교 고위당국자 간 만남이라는 의미도 있다.

성 김 미 대북특사의 방중도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성 김 특사가 방중기간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과 회동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수석대표회의에서 북한에 검증 이행계획서 초안이 건네진 지 한 달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으로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들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